

「청탁금지법」 시행이후 인식개선 설문조사 결과보고

< '18. 10. 4(목), 감사실 >

1. 추진배경

- 「청탁금지법 제(‘16.11.30) · 개정(‘18.1.17)」에 따른 우리 원의 인식 · 체감변화 등 효과를 분석하고 취약분야 개선 등 청렴정책 반영

* (관련근거) '18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(청렴문화 정착)

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인식개선 설문조사 추진 (감사실-839, '18.9.17)

2. 설문조사 개요

- (조사명)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의 체감변화 조사
- (참여대상) 우리 원 직원(48명)
 - ※ 현황 : 직위별(보직자 5명, 비보직자 43명), 성별(남성 25명, 여성 23명), 연령별(30세 미만 8명, 30~40대 36명, 50대 4명)
- (조사기간/방법) '18. 9. 18(화) ~ 9. 21(금) / 오프라인 설문(무기명)
- (조사내용)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사회변화, 준수여부, 효과적인 홍보 수단, 조직내 변화체감, 교육 등 노력 등 효과분석(총 10문항)

< 설문조사 내용 >

설문분야	설문 내용(조항)
청탁금지법 시행관련 인식도	①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
	② 청탁금지법 준수율
	③ 청탁금지법 실제 생활 영향력
	④ 청탁금지법 홍보의 효과적 수단
	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 체감도
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개선 효과	⑥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관행 개선 여부
	⑦ 청탁금지법 정착 노력 여부
	⑧ 청탁금지법 정착 구체적 활동
청탁금지법 발전방향	⑨ 청탁금지법 교육의 효과성
	⑩ 청탁금지법 발전방향 의견 (주관식)

3. 설문조사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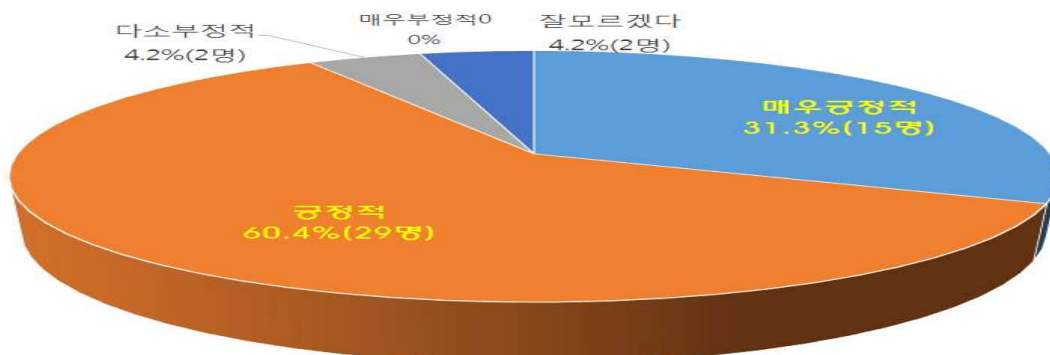
- 우리 원 직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**「긍정적인 영향 [91.7%응답]」** 을 미치고 있으며, **「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음 [89.6%응답]」** 으로 청탁금지법 인식도와 준수율이 높다고 인식
 - * 권익위 등 부처 및 주요 공공기관과 비교시(90% 상향 수준) 보통 수준
-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**공직생활 및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고 있으며[89.6%]**, 시행에 따른 변화체감 효과*도 높음
 - * 부정청탁 관행 및 접대문화, 갑을관계 및 외부강의 신고관행 등 제도 개선 등
- 내부 지침 마련, 교육, 홍보, 청렴프로그램 등으로 **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 노력에 긍정적 영향[85.4%]**과 함께 사회적으로 부정청탁관행 개선*을 위한 지속 노력도 필요
 - *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다(64%) ↔ 그렇지 않다•잘 모르겠다(35.4%)

□ 청탁금지법 시행관련 인식도

①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

- (결과)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“**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**”고 대다수(44명, 91.7%)가 응답
 - 다소 부정적이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(4명, 8.4%)
- ⇒ (분석)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 유발 주요행위금지 등 청탁금지법의 순기능에 대해 점차적으로 사회문화 정착을 인정

<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>



② 청탁금지법 준수율

- (결과)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서 “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”고 긍정적(43명, 89.6%)으로 응답, 반면 ‘별로 그렇지 않다’도 응답(5명, 4.2%)

⇒ (분석) 우리사회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도와 준수율이 높음



③ 청탁금지법 실제 생활 영향력

- (결과) 청탁금지법 시행이 “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지 않다”고 긍정적(43명, 89.6%)으로 응답
 - 반면, 지장을 받고 있다와 잘 모르겠다도 응답(5명, 10.4%)

⇒ (분석)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사회 등에 업무 불편보다는 부패 예방의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환경 마련

④ 청탁금지법 홍보의 효과적 수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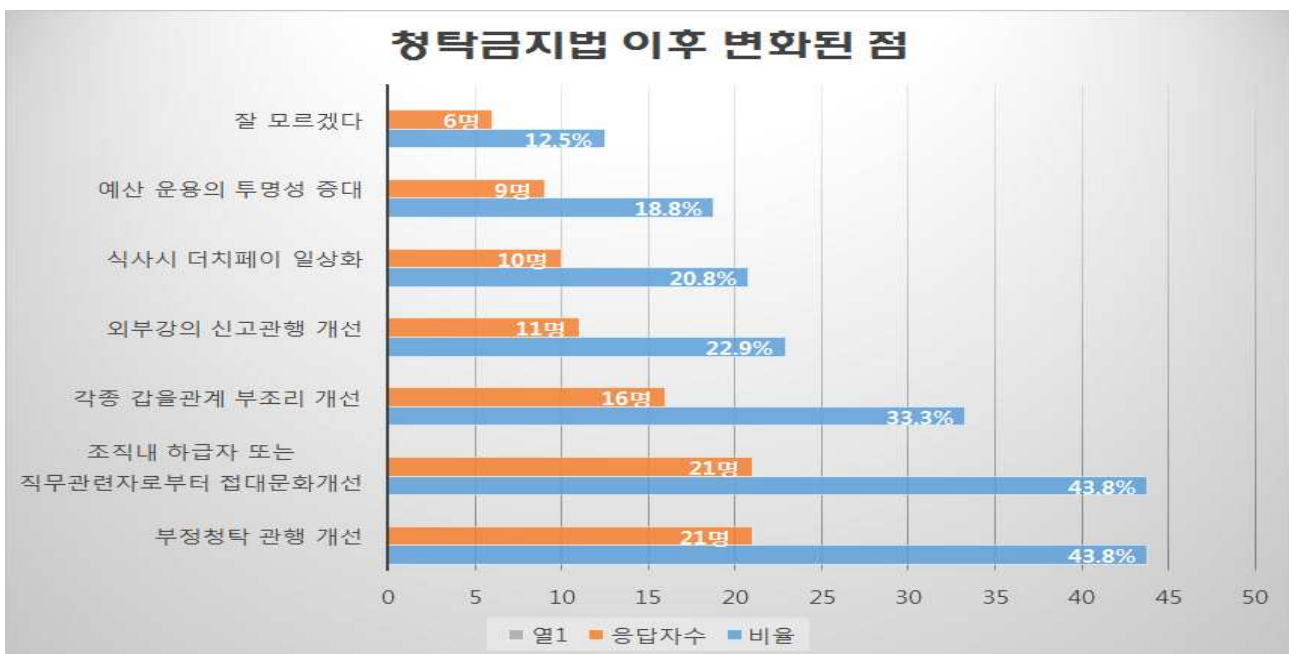
- (결과) TV·라디오 방송광고(17명, 35.4%), 온라인 홍보(11명, 22.9%), 교육자료(10명, 20.8%), 리플릿 등 홍보(5명, 10.4%), 공모전(3명, 6.3%)

⇒ (분석) 법 홍보 수단으로 대중적 매체나 시각적 홍보매체가 효과적

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 체감도(복수응답)

- (결과) 부정청탁의 관행 및 접대문화 개선(각 21명, 43.8%)이 가장 높고 갑을관계 개선(16명, 33.3%), 외부강의 신고관행 개선(11명, 22.9%) 등을 우리 원에서 가장 많이 변화된 부문으로 응답
- 또한, 식사시 더치페이(각자내기) 일상화(10명, 20.8%), 예산운용의 투명성 증대(9명, 18.8%) 등도 응답, 한편 조직내 변화된 모습을 잘 모르겠다고 부정적(6명, 12.5%)으로 응답

⇒ (분석) 청탁금지법, 부당업무지시, 외부강의 신고 등 주요사항에 대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홍보 등을 통한 체감효과 증대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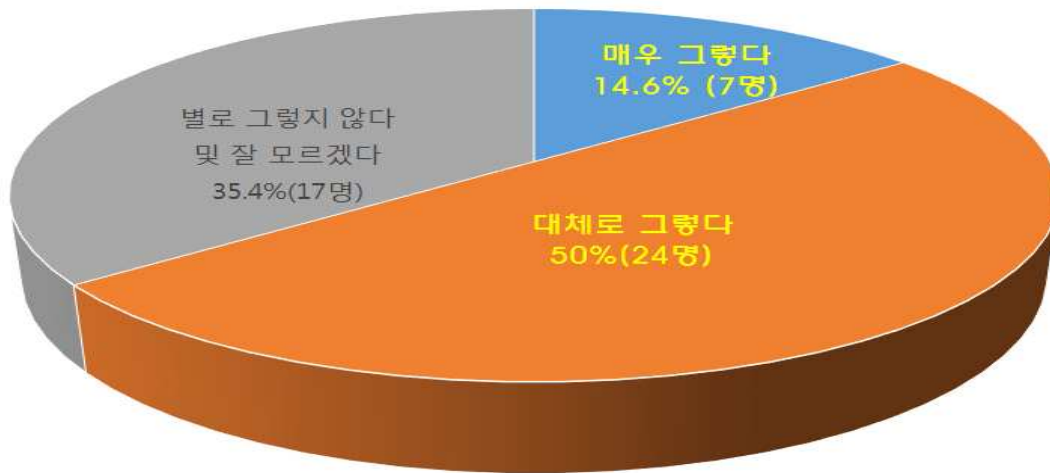


□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개선효과

⑥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부정청탁 관행 개선 여부

- (결과) 법 시행이후, 부정청탁 관행이 “사라졌다”고 긍정적(31명, 64.6%)으로 응답, 반면 “그렇지 않다 · 잘 모르겠다”도 다소 높게(17명, 35.4%) 응답

⇒ (분석)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청탁 등 부패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개선사항 및 극복과제도 존재



⑦ 청탁금지법 정착 노력 여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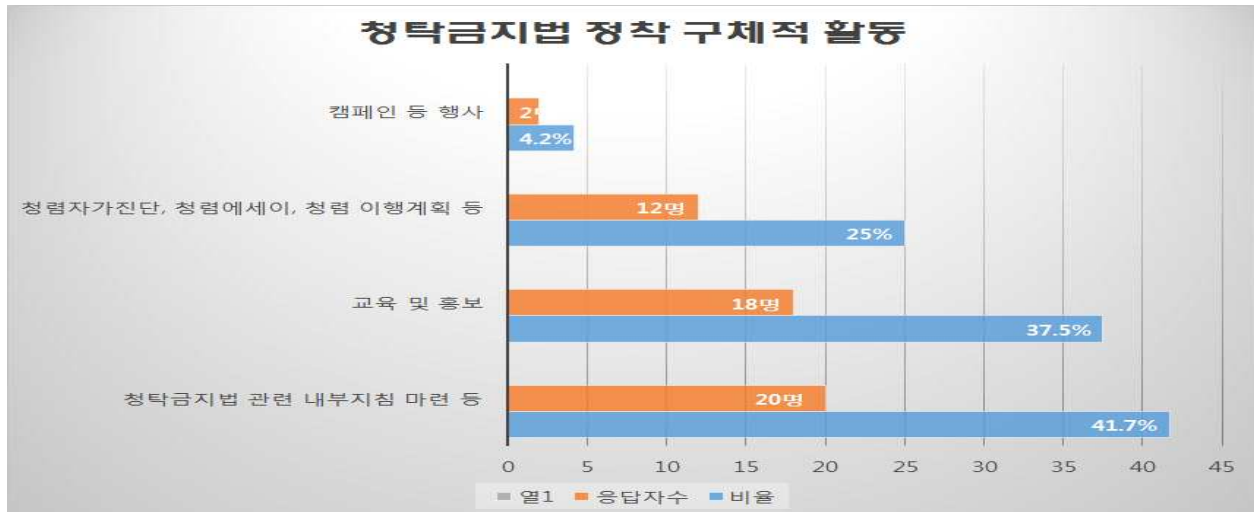
- (결과) 우리 원의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“노력하였다”고 긍정적(41명, 85.4%)으로 응답, 반면 별로 그렇지 않다·잘 모르겠다고 부정적(7명, 14.6%)으로도 응답

⇒ (분석) 청탁금지법의 제도 안내와 수행, 모니터링, 환류 등 선순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실시 필요

⑧ 청탁금지법 정착 구체적 활동(복수응답)

- (결과) 청탁금지법 관련 내부 지침(임직원 행동강령) 마련(20명, 41.7%), 교육 및 홍보(18명, 37.5%), 자체운영 청렴프로그램(12명, 25%), 캠페인 등 행사(2명, 4.2%) 등의 순으로 응답

⇒ (분석) 원내 임직원 행동강령의 적시 개정·홍보 및 청렴교육의 무화, 자체 준수프로그램(청렴이행계획, 에세이, 자가진단 등)의 다양한 청렴활동 전개 필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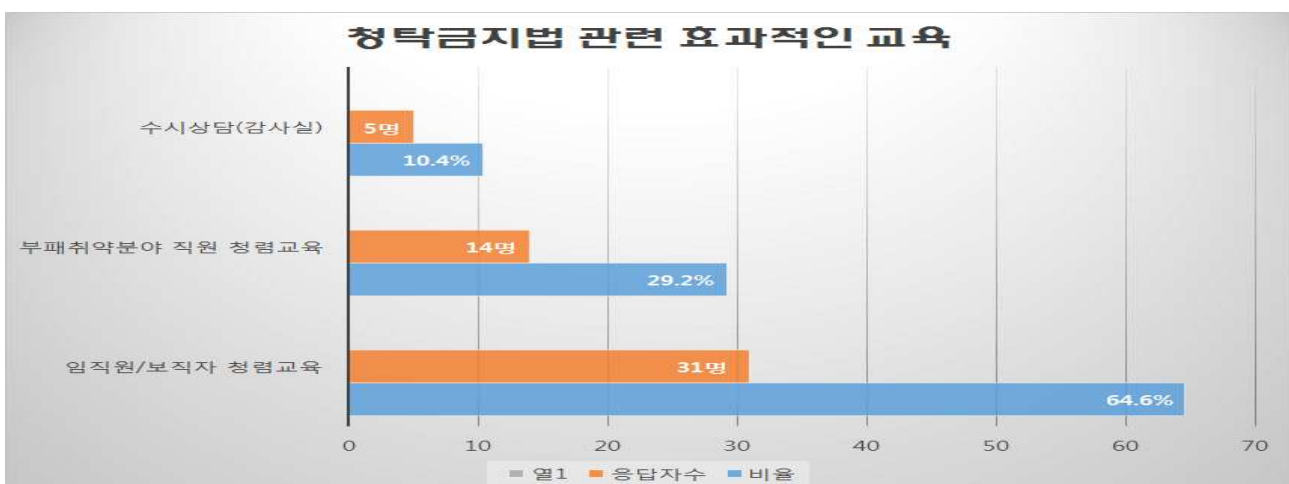
□ 청탁금지법 발전방향

⑨ 청탁금지법 교육의 효과성(복수응답)

- (결과) 임직원 청렴교육(31명, 64.6%), 부패취약분야 직원 청렴교육(14명, 29.2%), 수시상담(5명, 10.4%) 순으로 효과적인 교육 응답

* 사이버 청렴교육은 응답자 없음

⇒ (분석) 임직원 청렴교육 의무화와 부패취약분야 직원 청렴교육 등을 계층별·분야별 청렴교육 실시와 상담 운영 강화



⑩ 청탁금지법 발전방향 의견(주관식)

구분	주요의견
교육부문	• 청탁금지법 교육 체계화
	• 지속적인 내부교육 진행
	• 솔선수범, 상급자 중심의 청렴교육
	• 다양한 채널의 청렴교육 실시
비교육부문	• 청탁금지법 사례집 발간 또는 사례별 안내 필요
	• 청렴에세이 등 청렴활동 홍보
	• 위반시, 제재수준을 상향하여 경각심 배가 필요

4. 결과활용

- (보도자료 배포)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내용에 대한 온라인 언론 매체 활용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(10월 중순)
 - *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ICT 및 지역언론 매체를 통해 설문조사결과 보도
- (홈페이지 공시) 우리원 홈페이지(윤리경영)에 조사결과 공시(10월 중순)
- (청탁금지법 교육 활용) 청렴 교육자료에 통계치 반영(청렴교육시)
- (차년도 반부패 시책에 반영) 청탁금지법 인식 및 준수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결과 실시 및 결과 반영